

# 第243回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4 號 (定期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1月21日(金)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간사선임의견
2. 정치개혁안에 대한의견개진의견

### 審査된案件

1. 간사선임의견 ..... 3
- o 간사(李敬在)인사 ..... 4

(15시54분 개의)

**○위원장 목요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보고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제13차 회의 후에 위원장 명의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개혁안을 마련해서 우리 정개혁위로 보내달라는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공문을 받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어제 1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를 우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어제 있었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제1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에 없는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인 어제 9시부터 1시까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줄여서 범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회의가 있었습니다. 총 열한 분인데 두 분은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아홉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운영규칙이라든지 회의운영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 정했는데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깨끗한 정치, 둘째 일하는 정치, 셋째 민주주의 심화 이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차단,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고비용 정치 극복 그리고 일하는 정치는 국회와 정당의 생산성과 정책능력 강화, 정치의 질 향상, 민주주의 심화는 공정한 경쟁, 대표성 증대, 민주성 제고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기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범개혁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최대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어제 박세일 위원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목요상 위원장님 이름으로 이달 25일까지 범개혁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해 달라 그래서 동 범개혁에서는 회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두 차례 회의를 해서 거의 모든 안을 실제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련된 안을 정리 손질해 가지고 27일, 목요일에 다시 한번 마무리작업을 짓고 아마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그 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감을 받았고 그리고 거의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척은 빠

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법적지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 정치개혁에 관한 기구가 3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고 법적인 기구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고 그다음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고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정개특위 자문기구로서 의장단에서 합의된 것이 범개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문기구라면 법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안을 최대한 만들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의결하실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좋은 안이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다음은 지난 18일에 3당 간사들이 모여서 개혁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간사회의 결과를 金容鈞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鈞 委員** 지난 11월 18일에 있었던 3당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당 간사는 18일 오후 4시 정각에 만났습니다.

민주당의 朴柱宣 위원과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위원과 만났는데 자민련의 金學元 위원님께도 연락을 드렸으나 사정상 참석이 되지 않아서 3당의 간사가 모여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3당의 간사는 먼저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4당의 안을 한번 일별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합의점을 도출해 보자 하는 원칙을 세워 간사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과정에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거에 있어서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후보자 개인연설회 등은 폐지하는 것으로 합

의를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개인연설회는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金容鈞 委員** 무소속 후보자 개인연설회 이야 기입니다. 물론 거리유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당연설회와 대칭되는 무소속 후보자의 개인연설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 기탁금 반환의 조건을 종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하던 것을 10% 이상 득표한 자에게도 반액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회의원의 정수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총원을 273명으로 당론을 정하고 있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299석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자민련은 273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299석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매우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현재 선거법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이 소선거구제에 있어서 인구의 상·하한선 조정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위원의 숫자가 불가피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전체 정수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뜻에 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당에 물어가지고 당에서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제가 당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 총수 299석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도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바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朴柱宣 위원님과 신기남 위원님께 이러한 진지한 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했던 것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것에 대해 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들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수 299석에 관한 문제는 아직 미합의사항으로, 현안으로 남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299석을 합의한 이후 언론 등에서 간사회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것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챙기려면 272석만 하면 제 몫이 다 챙겨집니다. 299석을 했다는 것은, 27석의 확실한 신인을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고 또 총선에서 물갈이 되는 인원을 합한다면 17대 국회는 상당히 많은 수의 신인이 영입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한 논리에 의한 ‘제 몫 챙기기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전부 모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를 뽑아 그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 대의정치를 통해 나라를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대표자가 골고루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느냐, 또 그 대표하는 행태가 적정하냐 아니냐를 검토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문제 등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좀더 나은 국민대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문제 내지 축소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국회의원의 제 몫 챙기기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양당 간사님들과 또 여기 계시는 정치개혁특위 위원님들께 제 소임을 열심히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당내의 사정으로 인해, 또한 이 중요한 정치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유능하고 유덕한 인사가 간사직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오늘로서 한나라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치개혁특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사를 선정하셔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정치개혁 일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지난 18일 3당 간사님들이 협의하셔서 합의된 결론 부분을 지금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된 보고내용을 토대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는 정치개혁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 행정개혁

시민연합 박수정 기획부장님, 참여연대 인턴 이영주님, 참여연대 간사 이지현, 전진한, 한기선, 홍석인 네 분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홍애란님 이렇게 일곱 분이 참관 신청을 해 와 제가 허용했습니다.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金容鈞 간사님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동안 우리 정개특위 운영을 위해 애를 써 오셨고 또 국민들이 여망하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오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간사직을 물러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끼리 그 문제를 논의해서 처리한 뒤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1. 간사선임의견

(16시09분)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정식의제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견을 상정합니다.

**○朴柱宣 委員** 위원장님! 金容鈞 위원님의 사퇴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말씀하십시오.

**○朴柱宣 委員** 그동안 정치개혁 법안을 성안시키면서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을 이번만큼은 정말로 기대한 만큼의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투철한 의지와 정신을 가지고 임해 오신 한나라당 金容鈞 간사님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론을 어거가면서 간사협의를 잠정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지도부의 질책을 받고 경질됐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간사회의 석상에서 金容鈞 위원께서는 분명히 ‘우리 당론하고는 틀리지만 간사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당론 절차를 확정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잠정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사로서 추호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金容鈞 간사는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뽑힌 한나라당 출신 간사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 아무리 한나라당 내부 일이라고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간사를 경질하라, 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당의 당론이 있겠지만 그

리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에 때문에 정치개혁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론이라는 것은 각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도 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지 한나라당 당론은 절대 변경이 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고 정개특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합의와 앞으로의 회의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간사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사 입장에서 金容鈞 위원님께서 사퇴하신 변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동료 의원이자 간사로서 계속 간사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잘 들었습니다. 물론 朴柱宣 위원님의 충정어린 동지애를 높이 평가하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본인이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간사직을 사임하겠다고 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수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당에서 교체하려고 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끼리 의논을 한 결과 본인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고 대신 李敬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쪽 간사로 李敬在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간사(李敬在)인사

(16시16분)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李敬在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李敬在 **위원** 한나라당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고 시대적 요청인 정치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동안에 金容鈞 간사께서 폭넓고 광범한 지식을 가지고 정치개혁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시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

하고요. 저는 뒤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개특위 산하에는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각각 소위원회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종희 위원님과 黃昌柱 위원님이 우리 정개특위 위원으로 새로 보임해 오셨는데 두 분이 보임해 오신 것을 계기로 해서 소위 위원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더니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동안에 관계 소위에서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을 다른 소위로 바꾸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종희 위원님과 黃昌柱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리라고 전체를 하고 박종희 위원님은 정치자금법소위원회, 黃昌柱 위원님은 정당법소위원회에 모시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회의 결과로 보고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남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기남 **위원** 지난 11월 18일 간사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합의사항으로 배부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본격적인 합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로의 주장, 당론을 내놓고 비교검토 한 것뿐이지요. 비교적 손쉬운 부분 몇 개만 합의형식으로 했고요, 나머지 뼈대를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많아서 앞으로도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나 하는 문제, 비례대표 제도를 권역별 비례대표냐 뭐냐, 또 후원회를 비롯한 정치자금제도 문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후원회 전면 폐지와 법인세 1% 기탁금제도,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소소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과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당이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정수는 299인으로 환원하고 증원 부분은 모두 비례대표에 배당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의원정수 환원 문제를

일부에서 ‘밥그릇 챙기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임기가 끝나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기득권이 없습니다.

13, 14, 15대 국회 때 299명이었던 것이 IMF로 인해서 26명이 줄었지요. 그리고 48년 제한의회 때는 인구 2000만에 2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4800만으로 16대 국회 초기에 비해서 근 200~300만이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양원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원제에 머무르고 있고요. 또 비례대표가 상당히 순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어서 제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각 당에서 비례대표의 과반수는 여성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마당에 지역구는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증원하게 되면 여성의 정치참여도 많이 증대할 것이고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의 예로 보나, 우리 역사로 보나,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보나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299명으로의 환원, 비례대표의 증원 배당 이것을 당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인세 1%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준조세이고 이것을 어떻게 배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명확치 않고 국민적 저항이 많습니다. 후원회제도도 소액다수 위주로, 그리고 신원도 공개하고, 액수도 제한하고, 사용방법도 제한하여 투명하게 함으로써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거기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선거연령을 인하한다든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의 당내 경선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한다는 등의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돈 안 쓰는 정치를 위해서 지구당 폐지 같은 것도 저희 당론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당의 견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토론을 해 봐도 쉽사리 결말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를 해 버린다면 쉽습니다마는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맞추어 4당 대표의 극적인 합의에 의해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법률적 성격이 자문기구라는 것이 좀 아쉽

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기대를 겁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논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실제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로 오게 되면 그대로 받기를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안은 불가능하고 과연 어느 세월에 이것이 확립될는지,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 새 선거법이 빨리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결론이 올해 내로 날 것 같으면 구체적인 절차를 거기에다 부가시켜서 안으로 확정해서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金學元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金學元** **委員** 지난번 4당 간사회의 참석 요청을 받고도 우리 당의 중요한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 제2항 중의 네 가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준비활동 일정기간 허용이라든지, 합동연설회 및 정당연설회의 전면 폐지라든지 또는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문제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273석에서 299석으로 늘리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 내용 속에는 비례대표의원과 지역구원의 비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나중에 제2차적인 합의에 의해서 재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원래 299석이었던가 지난번의 구조조정으로 273석으로 축소된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의원 수를 좀 늘려가지고 여성 및 직능대표성을 좀 늘려보자는 취지에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대선자금이라든지 권력형 비리문제로 인해서 국회의원, 정치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풍조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점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것이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인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신기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여러 가지 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그리고 여성계를 망라해 각계각층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협의회인 만큼 이 안을 좀 지켜보면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협의한 내용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개혁, 특히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은 선거의 게임에 대한 물입니다. 이 게임에 대한 룰은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부당하거나와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름을 할 때 살바씨름만 하다가 결국 씨름을 하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바씨름을 제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제3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고 정치개혁협의회의 안이 나오면 4당이 잘 조정을 해서 단일안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수고하셨습니다.

李方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李方鎬 **委員** 저는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협상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기남 위원, 金學元 위원께서 대체로 자기 당론에 관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각 당의 여러 안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많은 토의와 여러 회의에서 의견이 개진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체회의는 대단히 비능률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표나 소위원회에서 밀도 있

게 쉬운 것부터 서로가 절충을 해 나가는 운영방식, 4당 간사회의도 수시로 열고 분과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려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접목을 할 수 있는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정치개혁협의회의 지위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자문기구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망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나오리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신기남 위원께서 “우리가 합의할 수 없으니 거기에 전적으로 위임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치개혁이든, 정책이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수표식으로 외부 자문기구에다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포기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최대한 협의해서 합의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좋은 안들은 참고하고 때로는 자문도 구해서 우리 정치권이 빠른 시간 내에 타협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정치개혁협의회의 의견은 존중을 하되 국회가 중심이 된 여러 가지 정치개혁에 관한 입법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고 특히 선거구 문제인 인구의 상대적인 편차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문제와 인구의 상·하한선 문제는 연말까지는 매듭이 지어져야 되고 그래야만 부수적으로 다른 모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목요상** 수고하셨습니다.

威承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威承熙 **委員** 저도 합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구제에 대한 현재 결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범치주의를 존중하는 한 그 정신은 존중해야지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달리 해석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요. 선거구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결정을 존중해서 하다 보면 의원 수가 다소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꼭 273이어야 한다, 몇 석이라도 늘어나는 것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리는데 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273명도 많다. 하는 일도 별로 없으면서 273명까지 뭐가 필요하나? 한 100명이면 되겠다’ 그러면 100명만 할 것입니까?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쓰는 방향에 따라서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결정을 존중해서 조정을 하다 보면 다소 늘 수 있으면 느는 대로……

또 비례대표로 할 것이냐, 선출 의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례대표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원 자질은 굉장히 훌륭한데 선거에 경쟁력은 없는 분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비록 단일일지언정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대한 대변자로서, 당리당략에 속하지 않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일하라고 비례대표를 두는 것인데 제가 한 3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물론 몇몇 훌륭한 분도 계십니다만 대체로 비례대표로 된 분들이 오히려 지역구 의원보다 더 당리당략적이고 당의 총재 내지는 당 의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그 당이 힘이 없고 내년도 선거에 별 개런티가 안 된다 싶으면 그다음에는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해 먹나’ 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비례대표를 둔 본연의 취지는 전부 다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대의정치 내지 책임정치에 충실하게, 최소한 자기 선거구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것이 더 옳다,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은 최소한 지역민에 대한 책임은 지고 여론의 동향은 알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다가 안 되면 다음번 지역 선거구 챙기기에 바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꼭 비례대표로 하려면 그렇지 않고 정말로 전문가다운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활동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으면 말로만 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차례에 걸친 시행착오 속에서 봤지 않습니까? 싸움하지 말라고 국회의원 하는 데 가장 예민하게, 당리당략으로 싸움판이 벌어질 때 제일 앞장서서 추한 꼴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비례대표는 정말로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게 하는 개런티나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 숫

자를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오히려 당을 움직이는 몇몇 사람에 대한 논공행상 내지 힘을 부여하는 구실을 제공할 뿐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찬동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예비후보자의 선거준비활동을 선거일 전 90일로 허용한다, 물론 새로운 선거지망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기회균등을 주고 선거준비활동을 하라는 것은 좋지만 말이 선거준비활동이지 선거준비활동이 결국 선거운동입니다. 사실상 9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엄연히 법에는 내년 2월까지 임시회의를 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현역 아닌 예비후보들은 이미 90일 전부터 본격적인 선거준비활동이라는…… 선거운동과 선거준비운동이 무엇이 다른지 법에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될지 모르지만 대중 준비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현역 의원이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같이 더불어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90일이라고 하면 내년 1월부터 국회는 사실상 문 닫고 선거운동에 진입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90일, 그 장장기간 동안 서로간의 비방, 당리당략에 의한 당 대 당의 비방, 후보 대 후보의 비방 이런 등등 해 가지고 90일간의 난맥상…… 언론에서는 밤낮 그런 네거티브한 기사로 먹칠을 해 댈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경제적인 측면과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정치인들은 밤낮 싸움질만 하나 하는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엄연히 2월 말까지는 우리가 임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법안도 통과해야 되고 다 하게 되어 있으니 나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 3월부터 4월 15일까지 하면 한 45일 안 됩니까? 40일이면 뒤집어쓰지요. 자기를 알리고 정책을 알리고 당의 정책을 알리는데 40일 이상 더 필요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40일 그 많은 날짜를 다 뭘 합니까? 어차피 놔두면 돈만 더 들어 가지요. 유권자한테 뿌리는 못된 짓은 안 한다 해도 주 조직원을 움직이는 밥값이 들어가도 더 들어갈 판이라고요. 돈을 줄이는 선거를 하자고 해 놓고 선거운동기간을 늘리자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90일이 나왔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마지막에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

이 없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에 현행 개인 후원회 한도가 개인의 경우에 2000만원, 법인의 경우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영수증을 끊고 모든 것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다 해도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낸 사람과의 어떤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것을 또 뇌물이라고 해서 요즘에 보니까 자꾸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후원금제도가 있어야 할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후원금 낸 것 중에서 정말로 과거에도 어떤 부탁한 적 없고 이 순간에도 부탁한 적 없고 미래에도 부탁하지 않을 후원금이 과연 몇 푼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형제자매 빼 놓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다 뇌물이지요. 액수가 적은 것은 괜찮다고 누가 그러니까? 2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어느 법에 되어 있어요? 10만 원도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이 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는 후원제도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2000만 원, 5000만 원이 지나치게 액수가 커서 뇌물죄로 의율하지 않을 수 없다면 액수를 낮추라는 말이지요. 2000만 원, 5000만 원을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바꾸든가 그것도 많으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바뀌어도 좋습니다. 하여간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정당한 후원금인 것이지요.

미국 보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트렌트 공화당 원내총무가 자기 출신지역인 미시시피주에 자동차공장 유치하려고 업자들을 5명이나 데리고 한국에 왔습디다. 그 사람이 업자들이 내는 경비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기왕 들어올 것 우리 미시시피주로 현대자동차를 유치해 주십시오’ 이라고 돌아다니던데 이것은 명백히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사경제에 개입한 것인데 이것이 미국 국익을 위해서, 미시시피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당당하게 로비하고 당당하게 후원금 받지 않습니까? 액수가 많아서 곤란하다면 액수를 줄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후원제도를 두는 한 그것에 대해 명쾌해야지 검찰이 봐서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니까 후원금일지라도 대가성이 있으니까 안 되겠어. 감옥 좀 가야 돼’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은 형법상 뇌물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치러진 것은 뇌물죄로 의율할 수 없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의 절차와 방법을 달리 했을 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율하도록 해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활동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벗어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 중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영수증 처리하고 후원절차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때 업자를 위해서 이상한 발언을 했나 안 했나 속기록을 뒤져 가면서 뇌물죄 여부를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러면 왜 후원금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후원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천사 같은 마음으로 후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면 액수가 좀 큰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엮어 넣을 수 있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할 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목요상 말씀하세요.

○전재희 위원 우선 우리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의의 의견에 100%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보다 반영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늦어도 11월 27일까지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의견을 마무리 지어서 정치개혁특위에 넘겨주도록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당 당론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의원 수를 273명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불신과 경제상황만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민의의 대변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이 299인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비례대표는 46석에서 더 하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의원도 해 보고 지역구 의원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전문 분야의 의원들이 전국적인 시각으로 국정을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정수를 273명으로 해 놓고 인구 증가한 것을 반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



원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과 인구 증가를 반영한다는 원칙하에서 국회의원의 수가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당이 보낸 안의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헌당규상 비례대표의 50%를 교호순번제로 공천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등록하면 무효로 한다는 것이 당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률개정안을 보낼 때는 당헌에 있으니까 아마 실무적으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그 외에도 지역구에 여성을 30% 공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성 후보와 남성 후보가 국민정선을 치를 경우 가점을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합의한 사항은 당헌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추가적으로라도 다시 정치개혁특위에 보내 주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위원장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당도 내놓지 않았지만 또 하나 제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성을 30% 공천한 당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배부하는 안이 선관위 안과 열린우리당 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당도 지난번에 그것을 전체 당론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때 우리 한나라당에서 합의했던 것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데 쓰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안도 앞으로 정치개혁특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朴柱宣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朴柱宣 委員** 먼저 몇 분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장 자문기관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설치되어서 활동이 민첩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타협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문기구는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일 뿐이고 국회의원이나 정개혁위 위원, 그리고 간사가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4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중재자나 심판자가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주장할 내용이 저희들 생각과 90% 이상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90% 이상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개혁을 협상하는 자체도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개혁을 논의하

면서 정치개혁 협상, 정개혁위 운영이 아주 비개혁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권위도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도 있고 또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안을 내는 것은 그분들의 안이고 또 우리가 그분들의 안을 받아 가지고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업무를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날짜를 신속히 잡아 가지고 4당 간사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만약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정개혁위에서 제안되면 순수한 마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개혁을 시키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으로 환원하자는데 잠정적인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더니 모든 언론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지금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깨끗한 정치를 못 하냐, 지금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때냐, 할 것은 안 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 이런 취지로 보도되었어요. 그 보도를 보고 저는 너무너무 아연했고 도대체 어떻게 보는 시각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위원장님 이하 정개혁위 위원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족한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개혁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되는 선거제도,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금 개업을 해 놓고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특위 위원장께 보낸 하루빨리 선거제도와 지역구 선거구원 수를 확정해서 보내달라는 공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선거구획정이 12월 31일까지 한정합헌 결정을 받았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선 빨리빨리 의원 수를 결정해 가지고 획정위에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어차피 손질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하자…… 그래서 저희 민주당의 경우는 인구도 증가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10%인 23석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5%가 될지 7%가 될지는 협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된다고 하고 한나라당에서는 현재 인구 증가가 200만 명 이상 되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각당의 논거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299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론절차를 밟는 조건으로 하고 299명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사실을 보도하자,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99석으로 증원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앉은 국회의원들이 내년 17대 재선에서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현재 국회의원이 밥그릇을 챙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299석으로 의원정수만을 환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 당에서 이 같은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합의도 되었어요.

예를 들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후원금 기부의 투명성, 지출의 투명성도 사실상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후원회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법인세 1%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탁금제도로 운영하는 주장을 해서 그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는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후원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선호지지와 잘해 달라는 기대와 부탁을 겸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 내지 지원금으로서 후원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무조건 기업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잘못된 국회의원한테도 일정 비율에 따라서 후원금을 나누어줘야 한다? 그것은 후원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준조세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일정액씩 돈을 얼마 준다는 '국회의원지원세'를 새로운 세목으로 해 가지고 국세 관련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금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불신을 받는 마당에 정경유착이라는 검은 돈의 유혹의 고리를 차단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경유착의 단계를 넘어서 국회가 기

업에 예속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석비례에 의해 가지고 기탁금을 나눈다고 한다면 한번 1당이 되는 당은 항상 1당이 되고 소수당은 항상 소수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탁금을 많이 받는 정당은 선거운동도 자유롭게, 정책개발도 훨씬 자유롭고 폭넓고 깊게 할 것이지만 기탁금이 아주 소액에 한정되는 정당은 어떻게 더 정책을 개발하고 더 폭넓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군소정당도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면 후원자들이 생겨 가지고 잘하라고 격려하게 되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또 1당이 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후원회 제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기탁금을 받기 위해서 후원회제도를 없앤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개인후원회도 없앤다…… 저는 정치자금을 절대 안 받습니다. 가장 개혁적이라면 우리 정치권은 일체 정치자금 받지 맙시다. 그러면 가장 개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요성은 가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해서 원한과 분노를 갖고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받는 정치자금에 대해서 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후원금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자금이라는 미명하에 공갈을 하거나 아니면 뇌물로서 거액을 받아가는 행태를 막자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받는 것이 봉쇄된 상황에서는 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손벌려 가지고 뇌물이나 불법적인 자금을 주고받는 행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것이다, 불법이 만연되고 더 확산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현실에 입각한 개혁을 해야지 이상만 쫓다가 또는 현 정국의 국면 전환을 위한 면피용 제도를 찾다가 모두가 다 와해되는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되

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상에 임하는 각 당들이 당론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측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이 비난하기 때문에, 비난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그 비난의 방패막이 밑에서 수혜를 누리겠다는 자세를 가진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용기도 필요하고 또 자신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모든 것을 고쳐 가지고 프레스한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갖고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왜 늘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속기록을 보게 되면 제가 이론적으로 외국의 예라든지 현실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천정배 위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국가가 정치개혁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열린 자세를 가져서 국민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게 된 것이 우선 기쁘고 또 개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의 면면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충분히 잘 대변해서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신망을 가진 분들로 보입니다. 이 협의회가 앞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우리 정치개혁특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야 물론 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요. 입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과연 공정한 국민의 대표로서만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일종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를 보면 먼저 한나라당의 최秉烈 대표께서 대표 취임 즉시 이것을 제안하셨고 그 당시 제안내용 중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정치적으로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

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그 후에 4당 대표들 간에 합의로 이어졌고 오늘에 와서 이런 정치개혁협의회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면 협의회 안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한, 무슨 헌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한 우리 위원회가 매우 무겁게 존중해서 거의 그대로 입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아까 우리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간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원 정수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3당의 간사 위원들이 정수를 늘리기로 잠정 합의한 정신이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의원 중에 비례대표가 기형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예 비례대표제도를 두지 않으면 모르지만 비례대표제도를 두는 마당에는 현재처럼 273명의 의원 중에서 불과 46명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 전용 구 문제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제안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 내의 개혁특위 간사로서 여성 전용 구를 초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성 전용 구를 설치해서 여성 정치인들의 진출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정수를 증원해야 될 실질적인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한다고 하니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다소 늘리고 또 여성 전용 구 등을 설치해서 여성의 의회 진출을 늘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위해서 299석 정도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우리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1%를 떼서 정치자금으로 쓰자는 문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법인세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간에 결국 국고를 가져다가 정치자금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국고지원금입니다. 현재도 각 정당에 상당한 금액의 국고지원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유권자 1인당 800원씩의 일상적인 지원금이 있지요. 그것도 한 240억 됩니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당한 그 이상의 지원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작년처럼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다 있었던 경우에, 작년에 제가 보니까 1100억이 넘는 국고지원금이 이미 정당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국고지원금이 각 정당이 제대로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권을 가진, 과거 같으면 총재라든가 몇 사람이 아주 투명하지 않게 당내에서도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 이것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각 정당에 주어지는 국고지원금도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1%를 따로 떼겠다는 발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후원회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회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이런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얼마만큼, 후원금을 얼마만큼 국민들로부터 모금했느냐 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하는 큰 요인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건지 못하는 정치인은 경선 과정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경선운동을 못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국민의 지지 정도에 따라서 후원금 액수가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정치인의 성패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원회제도는 매우 훌륭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원회제도가 문제되는 것은 이 후원회를 통해서 받는 자금이 도대체 적법한 자금인지, 무슨 대가성이 있는 자금인지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검증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원회제도 개혁의 핵심은 후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즉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정 액수의 정치자금이 주어졌을 때 어떤 국민이 어느 정치인에게 또는 어느 정당에게 얼마의 자금을 주었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훌륭한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후원금

또는 연간 통산 5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주어질 때에는 반드시 기부자의 실명을 밝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데 저만 후원금을 준 사람의 실명을 밝히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상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모든 정치인이, 우리 모두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지켜 가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감내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번에 우리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요상** 전제회 위원 말씀하세요.

○전재희 **위원**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 제가 4년간 후원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4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후원회만 안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 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지지를 표현하는 국민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후원회제도 없이 국회의원이 정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법인세 1%를 기탁하지 않더라도 아예 후원회제도 없는 국회의원제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쓰는 돈은 크게 선거비용, 지역활동비, 의정활동비 그다음에 당내 경선을 위한 활동비인데 제가 볼 때는 선거공영제를 지금과 같이 비용보전식으로 하지 않고 이력서와 후보만 가고 나머지는 모두 선관위가 맡아서 한다면 선거비용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활동비도 지금 주고 있는 경조품을 금지하면 그것도 지구당 폐지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정활동비는 현실에 맞게 주고 그것을 연필 사는 돈까지 전부 영수증을 붙이게 해서 완벽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내 경선을 위한 비용도 앞으로 당내 경선 자체를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관위가 관여함으로써 돈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록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이상적이라서 도저히 4당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후원금은 우편·온라인 모금만 할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편 모금만 하거나 온라인 모금만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실명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면해서 후원금을 받지 않고 우편·온라인 모금만 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논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출은 완전히 카드로 쓰게 하고, 선관위안은 지금 50만 원 미만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지출총액의 5%를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저는 30만 원으로 내려도 좋고 지출총액의 5%보다 더 낮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일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열정과 소신과 양심만 있으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소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규택 위원 말씀하시겠어요?

○이규택 **위원** 예.

○위원장 **목요상** 말씀하세요.

○이규택 **위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299명으로 하자는 등 정치자금에 대한 얘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면 맨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논의만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원회로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숫자를 299명으로 할 것이냐 현행대로 할 것이냐보다도 저는 선거구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구제로 갈 것이냐, 중·대선거구제로 갈 것이냐, 민주당 안대로 도·농복합제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먼저 되어야, 또 거기에 따라서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례대표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또는 권역별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소선거구제일 때 인구는 상한선을 얼마로 할 것이고 하한선은 얼마로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수가 나오고, 그러면 비례대표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만일 중·대선거구가 확정된다면 중선거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선거구 때는 인구 상한선, 하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의원정수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체회의에서 맨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니까 빨리 소위원회를 가동시켜서 거기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목요상**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까닭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전체회의에서 ‘4당 간사 간에 합의 도출을 좀 해 보십시오’ 하고 위임했기 때문에 그 간사회의의 결과를 받아서 오늘 전체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합의된 내용을 전적으로 그대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여기에도 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결과적으로 4당 간사님들이 하신 합의 내용을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곧바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일을 끌면서 전체회의에서 토론만 붙여 가지고는 부지하세월로 허송세월만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됐습니다. 따라서 각 당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소신은 피차간에 다 알 만큼은 알 수 있게 됐지 않나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또 지금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지난 18일에 1차 회의를 열고서 2차 회의는 11월 22일 토요일에, 또 3차 회의는 일요일인 11월 23일에, 4차 회의는 11월 27일에 이렇게 부랴부랴 휴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열어서 결론을 내겠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27일쯤 국민협의회에서 마련된 제정안을 국회의장한테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자문기구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분들

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마련해서 우리 국회에 제출해 준다고 한다면 그 안을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이 제출된 직후인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안을 근거로 해서 각자 또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해서 12월 1일쯤 우리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맺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택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28일까지 각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해당 분야에 관한 토론을 벌여서 거기서도 합의를 도출하셔서 결론을 내 주시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사, 그래서 28일 전체회의에는 적어도 각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도 조금 개선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선 정치개혁소위원회에 제가 몸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빠지고 저는 정치자금법소위로 옮기고 선거관계법소위원회는 오늘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되신 李敬在 위원님이 보임해 주시고 또 민주당 쪽의 요구에 따라서 정당법소위원회에 몸담고 계시던 黃昌柱 위원님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소위원회에 계신 金聖順 위원과 교체해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소위원회로 옮겨 주시고, 金聖順 위원님은 정당법소위원회로 옮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소위원회의 간사는 박종희 위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위원회 구성멤버를 개선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하도 유명무실하게 공전만 거듭하고 있고 시간은 촉박한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주마가편격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선거법소위원회는 李敬在 위원님이 이번에만해서 소위원장님이 되셔서 집중적으로 27일까지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소위원회에서는 박종희 위원님이 역시 집중적으로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민주당의 威承熙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오는 28일 임시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집중적으로 이 회의를 주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종희 위원님께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당법소위원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金聖順 위원님이 민주당의 대변인이시고 김택기 위원님은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지구당 문제라든지 신당 창당문제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서 이 정당법소위원회도 심규철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해서 27일까지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 소속위원들로만 회의 주재권을 드린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따지고 보면 아무런 결실 없이 회의를 마치는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도 송구하고 저 자신도 이렇게 결실 없는 회의를 자꾸 주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를 느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7일까지 범정치개혁협의회에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 본격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당에서 나온 의견과 함께 29일, 30일, 31일 이렇게 사흘간 위원 여러분들이 진지하고도 심층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는 12월 1일은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쯤 결론이 나와 선거구제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서 지역구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가느냐 소선거구제로 가느냐, 또 어느 선거구제를 선택하든 간에 인구상·하한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의원정수는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넘겨주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서 오는 11월 28일은 대체로 소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늦어도 12월 1일은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확인을 합니다.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을 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전체회의에서 선거구제도만이라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범정치개혁협의회에서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현명한 결론을 내 주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시고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나 지역구 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국민적 소망을 12월 1일까지는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方鎬 委員 소위원회는 그 안에 안 열립니까?

○위원장 목요상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내일부터 27일까지 소위원회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소위원장님을 다 거명했는데 그분들 책임하에 27일까지 소위원회를 열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고, 2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범정치개혁협의회에서 넘어온 안을 근거로 해서 토론을 거친 뒤에 다시 소위원회에서 29일, 30일, 31일 거듭해서 합의도출을 유도해 주시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겠다 하는 저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많이 도움을 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李敬在 委員 간단하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로 나온 것 중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쪽에 선거구제를 말할 때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 그래 놓고 인구 상·하한선 11만~33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대선거구를 하면 인구 상·하한선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동시에 하시겠다는 뜻인지요?

○신기남 위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11만~33만 이런 것이 없지요. 그런데 한나라당이 입법권을 다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를 하도 완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안은 지역구는 동결하는 것인데, 역산을 해 보니까 11만~33만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목요상 소선거구제인 경우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재희 위원님, 아까 직접 말씀해 주신 한나라당에서의 당론인 여성부분에 관해서 빠진 부분은 좀 챙겨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희 위원 예.

○위원장 목요상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出席委員(14人)

金容鈞	金學元	목요상	박종희
朴柱宣	신기남	李敬在	이규택
李方鎬	全甲吉	전재희	천정배
威承熙	黃昌柱		

○請暇委員(1人)

이병석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전문위원	安秉玉